동아 90.11.24 (토)

經濟 社會분야 對政府질문답변 〈요지〉

국회 속기석

金 4년째 초과징수 말이 되는가

通貨과잉상태인데 왜 企業자금난 겪나

노사문제는 주택값 物價폭등탓 아닌가

八堂湖 시험준설 總理직접지시說 추궁

경제분야〈24일〉

◇張慶宇의원(民自) △6共출범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「무한욕구」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임기응변식 인기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. 실추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방안은△87년부터 연4년째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초과징수되는 바람에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. 금년말의 세계잉여금이 3조6천억원에 이를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한두해도 아니고 4년째 稅收추계가 이토록 틀리고 있는가. △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라 국내유가가 곧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, 정부는 내년초에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.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자리수 물가가 지탱될수 있다고 보는가△총통화량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기업은 자금조달에 목이 타는 「통화과잉공급속의 시중자금난」이란 부작용마저 낳고있다. 내년도 물가상승압력을 극복하고 통화의 왜곡된 흐름을 차단키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은 △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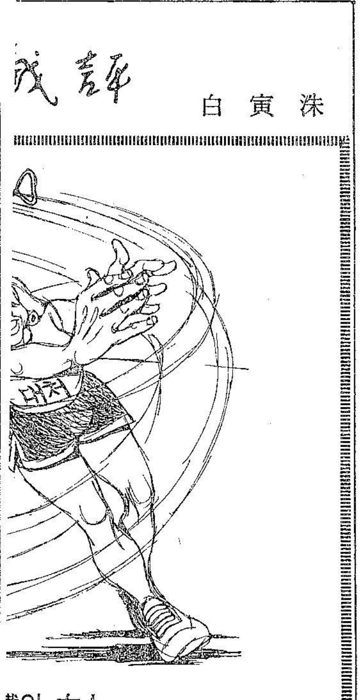
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蘇聯 北韓등과 물자교역을 추진해야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국가에 쌀을 원조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.

張慶宇의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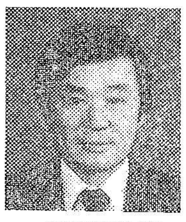
◇洪英基의원(平民) △90년 5월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재벌 주식의 46.4%가 기업주와 그 인척및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소유이다 △소득구조에 있어서도 85~88년까지의 4년간에 기업주소득은 80%가 증가한 반면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41.1% 증가에 그쳤다 △朴正熙정권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, 全斗煥정권은 물가안정을 경제운영의 지상목표로 삼았었는데 경제정의와 공정분배가 실종된 오늘 盧泰愚정권의 경제운용 지도이념은 무엇인가 △내년의 팽창예산은 금년2차의 추경과 함께 대대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케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자의 부족, 임금의 상승등이 예견된다△90년 10월20일현재 전체무역적자는 60

거대한 자본에의해 완전 점령될 것이다 △농어촌발전종합대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92년까지 농어촌개발에 16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△平民黨의 추곡수매에 관한 주장은 통일벼5백만섬, 일반벼 7백만섬이므로 수매대금은 총2조5천5백25억원이 소요된다. 이같은 소요자금은 정부의 양곡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있는 2조5천1백32억원으론 3백93억원이 모자라나 금년세계잉여금등으로 충당하면 될것이 아닌가.

洪英基의원


白寅洙

鐵의 女人


崔戊龍의원

◇崔戊龍의원(民自) △경제전문가들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不勞소득으로 놀고먹는 有閑族이 전국적으로 40만명에 달한다. 부동산 증권투기 고리대금업등으로 땀흘리지 않고 떼돈 버는 유한계층에 과감한 경제적 족쇄를 채워야 한다 △5·8대기업부동산강제매각조처후 정부의 의지가 퇴색되고있고 정부-기업유착설도 나돌고 있다. 매각진행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히라. 또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여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△아파트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. 양도세부과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양도세부담이 오히려 가격상승요인이 되고 있다. 따라서 과표를 현실화해야 하며 보유주택규모에 따른 稅누진율부과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△노사문제의 근본은 주택가격 임대료폭등 물가안정실패등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亂調때문에 임금인상분이 고스란히 물가폭등속에 녹아버리는데 있다. 최저생계비는 근로자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임금 주거환경 근로환경개선이 충족될때 일터는 안정을 되찾고 경제도약도 가능하다△우리나라 중소기업은 89년말 기준으로 2백4억달러를 수출, 전체 수출의 38.9%를 차지하고 전체근로자의 66.3%나 포용하면서도 대기업에 가려져 왔다.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더욱 보호해 주어야 하며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中小제조업체 지원대책도 세워야 한다.

朴英淑의원

사회문화분야

◇朴英淑의원(平民) △그린벨트내 용도별 토지형질변경 현황과 50대재벌의 토지소유현황을 공개하라 △92년까지 전국 상수원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고한 盧泰愚대통령의 약속은 실현가능한가 △앞으로 골프장을 얼마나 더 허가할 것인가. 골프장허가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△지난8월6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八堂湖 시험준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총리가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가. 서울시장도 골재채취에 동의했는가. 정부는 1천5백만 수도권주민들의 수돗물보다 값싼 골재공급이 더 중요한가.

△노조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노조전임직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라는 노동쟁의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있는가. 파업기간중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노사관계 질서문란업체로 지정해 어떤 불이익조치를 취했는가 △지배주주의 추천권만 가진 공보처가 泰榮을 새 民放의 지배주주로 결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△지배주주의 선정기준을 신

가 △泰榮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與黨의원중 주주선정과 관련해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의원은 없는가.

林仁圭의원

◇林仁圭의원 (民自) △지난날 못살았던 시절에 세웠던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재고할 때가 됐다. 정신문화 우선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. 다섯살난 어린생명을 생매장한 사건은 범죄적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사회 병리현상의 표본이다. 오늘날의 인명경시풍조와 도덕성 붕괴현상은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산 증거다. 문교예산은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GNP대비개념으로 최소한도치를 정해 장기적인 계획투자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△문화부가 마련한 문화발전10개년계획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총3조8천억원의 투자가 있어야 한는데 문화예산은 0.38%에 그치고있다. 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△정부는 남북교류와 대화에 임하는 목적과 통일을 주도할 가치관, 통일될 조국의 체제상을 분명히 해야한다 △입시위주로 돼있는 초중고교육을 개혁하기위한 문교장관의 복안은 무엇인가 △작년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설돼야할 노인수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않은 이유는.

외교안보통일분야답변〈23일〉

◇姜英勳국무총리 △국가